

社說

선관위의 횡포와 세척개정의 흠결

선거는 다수의 신념의 표출이며, 다수가 곧 정의를 가깝다는 오랜 믿음을 실현하는 방식이다. 그러나 이것은 그 절차와 실행 방식에 있어서도 또한 얼마나 민주주의적이나에 따라 논의의 여지가 있을 수 없을 수 없다. 그러기에 우리는 지난 며칠동안 있었던 수렴결과 총학생회 선거를 위한 여론의 움직임을 우려와 걱정으로 보지 않을 수 없다.

모든 선거권자와 피선거권자가 납득할 수 있는 공정한 선거가 아닌 다음에는 어떠한 결과도 결코 진정한 민주주의와 조화로서 선거의 자격을 얻을 수는 없다. 최근 있었던 총학생회 선거 시행세칙 개정을 둘러싸고 회자되고 있는 이야기는 선거라는 법정한 시기에 원칙론을 들어 불위를 깨닫게 할 수도 있는 소지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진정한 학원의 주인으로서 우리들의 자선에 대해서 반성과 각성을 촉구하지 않을 수 없다.

선거 공과 며칠전에 중앙선관위의 의결로 세척이 개정되어 학우들에게 공개적인 토론이나 공과, 혹은 논쟁조차도 없이, 후보자들에게, 그것도 등록비납입에 선행되어야 하는 일을 우리는 절대로 결한 일이라고 묵과할 수가 없다. 게다가 개정된 시행세칙의 몇몇 부분이 상식적으로 납득되지 않는다고 할때는 더욱 더 그러하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 구성이 대외인회를 기초로하고 있다는 점에 대해 그들은 정치학 우를 대하는 가장 중요한 기관의 하나이다. 따라서 그들은 전제 정치 학우들의 전지한 의견을 수렴하고 경청하는 철저한 자세를 가져야 한다. 민주주의의 실현과당으로서 선거라는 것을 인식한다면 절차의

정당성이나 시행과정의 적법성을 지켜야 한다는 것은 최소한의 기본 골격이라고 우리는 생각한다. 선관위의 어떤 시행세칙 개정은 그 절차에 문제가 있어도 다수가 특정 후보자를 지지하는 것이 아니냐는 의심을 지어도 할 말이 없다. 결국 우리는 이렇게 개정된 시행세칙이 과연 우리가 우리의 대표자를 선출하는데 있어서 올바른 전행방향이 될 것인가하는 의문을 제기하지 않을 수 없다. 결과적으로 중앙선관위가 어떻게 구성되었느냐에 따라 선거의 결과마저도 좌지우지될 수도 있다는 것은 문제가 아닐 수 없다. 더욱이 대외인회의 활발하고 자주적인 의전수행과정 활동도 보장되지 않은 것이 우리들의 무관심에서 비롯된 것이라 하더라도 우리는 주권자의 권리를 몇몇 선관위 위원들에게 넘겨주고 그들이 어떻게 하든 하고 저렇게 하든 해야 하는 무책임한 상황에 처해 있는 것이다.

그러나 이제는 제대로 된 선거를 치루어야 할 때다. 아직 우리 경제인은 주인의식을 갖추고 있는 참다운 학생인이다. 민주주의를 실현할 양심적 대학인이 되어야 한다. 그리고 많은 수 있는 대외인회의 중앙선거관리위원회를 만들고 나아가 우리의 총학생장을 선출해야 할 때이다.

무엇이든 이제는 제대로 된 방식과 절차로 정당한 선거를 치루어야 한다. 그간에 무관심했던, 혹은 무시하고자 했던 기본에 충실한 선거를 치루어야 모든 경회학우가 만족할 수 있는 결과가 만들어지는 것임을 명심할 일이다 할 것이다.

우리는 우리의 '문제제기'가 선거기간중이나 지적하는가를 8천여학우와 함께 지적할 것이다.



이 동 선
(정치화 기사)

요즘을 살아가는 우리는 온 겨도 울지도 못하는 정당한 곳 흑스러운 일들을 많이 당한다. 그중에 가장 비탄한 일은 바로 며칠 전인 10월 26일에 볼 수 있었다. 1천여명에 달하는 사람들이 동작동 국립묘지에서 열린 박정희 추도식에 참여한 것이다.

사람들이 집단적으로 어느 특정일을 기억하는데는 그날이 공동체가 어떤 방향으로든 전환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했다는 상징적인 의미때문일 것이다. 그렇다면 10월26일은 어떤 날인가? 그것은 1961년부터 1979년까지 무려 18년 동안 독재의 칼을 휘둘렀던 박정희가 죽은 바로 그날이다. 우리가 10월26일을 기억하는 것은 박정희의 죽음과 함께 그의 죽음으로 인한 역사의 반전때문이다. 그렇다면 15일을 맞은 박정희 추도식에 모든 참가자들은 무엇을 기억하고 무엇을 다짐하기 위해 한자리에 모였는가?

그의 자전사적 연대기는 1917년에 태어나 1979년에 죽은 63년의 세월이지만 그의 인생 역정은 우리의 현대사만큼이나 파란만장하다. 그리고 그가 집권한 18년이 현대 한국사 회에 미친 영향은 실로 엄청나다. 그러나 그에 대한 평가는 극도의 찬사와 비판이 엇갈리는 아주 특수한 인물이다.

경제성장 지상과제

박정희는 집권기간동안 민족 중흥을 가장 기본적인 통치이념으로 하여 경제성장을 지상의 목표로 삼았다. 스스로 절대적 빈곤으로부터의 탈출이 5.16의 집권기간 동안 정책들이 경제성장을 기점으로 집행되었다. 이같은 정책은 양적인 측면에서는 괄목할 만한 성과를 거두었어 사실이다. 그러나 그 내용은 살펴보면 동업부문의 전진대적 낙후성, 대량으로 산출된

세를

박정희 추도식에 모인 사람들의 속뜻

이동민구의 저일금을 기반으로 한 산업개발, 국내 산업간의 구조적 연관관계를 결한 재외국민과 해외진출을 결한 재외국민의 장기집권 기제였던 유신체제는 안보위기를 효과적으로 이용할 수 있는 분단상황에서 경제적, 사회적 위기상황을 일거에 해결하고 집권체제에 대한 도전을 효과적으로 탄압하여 박정희 1인 장기집권을 추진하기 위해, 국제적인 주변

의 기적위에 건설되었던 다리가 붕괴되는 순간 박정희에 대한 찬양에서도 깨어나야 한다.

환상에서 깨어나야

10월 26일에 벌어진 일은 눈물짓는 추모의 자리만은 아니었던 것 같다. 당시 사람들이 역사적 인물을 기리는 것은 그의 삶의 행적이 우리의 현실에 들어 주는 메시지에 있을 것이다. 박정희가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는 무엇인가? 그가 '국가 재흥'을 외치고 있다. 그들이 그토록 재흥하고자 하

기면서, 현실적으로 정치적 재기를 위해 끊임없이 노력하는 것은 그 구제적 재흥에 포획되어 가는 행로에 기인한 것이다. 일부 모도에 의하면 노재흥의 대정부실은 이후 한때 부흥을 위한 재흥을 높였지만 각종 전 총무장관, 현 정권 조차도 범죄로 평가한 신군부 쿠데타의 조역인 허문도 전 장관 장관 등의 격려 전하가 끊이지 않았다고 한다. 그리고 유신체제 시절의 3공 인사들과 5공 및 6공의 군사적 권위주의 제제 지배그룹들이 계기에 안고 갔던 지역주의적 본질을 들고 올지도 모를 특정 지역 출신의 신당 소속을 골라 편입하는 파리의 식은 죽 먹기 편입인가.

정말로 기억할 일들

우리는 박정희를 기억하는 것 외에 반드시 기억해야 할 일들이 있다. 이 땅에 진정한 민주주의의 꽃을 피우고, 정의를 바로 세우기 위해 얼마나 많은 희생을 치렀는가. 우리 선배들의 피로써 어떤 결과를 달성시키는 것보다라도 최소한 지키기라도 해야 하는 것 아닌가. 아무리 거대한 문명정당라 하지만 이땅에 이르기 위해 얼마나 많은 희생을 치렀었는가. 이것을 다시 우리 선배들을 탄양하고 기억할 때는 바로 그들에게 다시 존경하는 마음을 보낸다. 대외 민족제당에 의지한 문명정당인 민주주의자들의 시선들은 이제 웅대한 유익을 가지고는 못 이바지도 될다. 우리는 다시 자신들의 면면을 되새기고 그들의 눈동자를 되새겨 보자. 그들이 우리에게 주어야 할 메시지는



지난날 26일 서울 동작동 국립묘지에서 열린 박정희 전대통령 15주기 추도식에서 최규하·전두환·노태우 전 대통령들이 묵념하고 있다. (서울신문)

정치의 변화와 남북대화를 위하여 취했던 일련의 정책의 제도화 및 집합적인 지배체제를 제기할 수 있다. 그의 집권기간에 그렇게 강조했던 경제개발에서조차 사회적 불평등과 모순의 심화, 농촌의 파탄, 국민에너의 남비 및 자원의 비효율적인 배분을 초래하여 급기야 1970년대 말에는 적자경제로 반전될 수밖에 없었다. 그리고 핵심적인 민주주의적 조건의 유신체제 하에서 국민들의 자유와 인권은 희생된 채 속박하는 획일적인 군사독재만이 판을 칠 수밖에 없었다.

따라서 '박정희는 군부독재자' 아니라 '박정희는 독재적인 재가'라는 도식적인 생각은 그와 그의 시대가 한국 사회에 남긴 독소의 증거는 단순하고 순진한 생각들이 이후 등장한 집권자들과 비교하여 '구약이'면만 박정희를 향유하는 오직못한 일들을 초래한 것이다. 그러나 한강

박정희에게 듣고 싶었던 메시지의 내용은 무엇이었을까. 그것은 그날 참석한 3공 유신인사들이 비망에 숨진 채로 정적 형제 재를 괴시하고, 정치적 의미를 담은 희곡을 서적하지 않은 일에서 그들의 숨은 의도를 알 수 있다. 즉 그들은 불온한 자인인 박정희를 그리워하는 것이 아니라 자신들이 처한 현실을 반추하여 과거에 자신들이 누렸던 기록들을 그리워하는 것이다. 그리고 과거의 영광을 되찾겠다는 불굴의 다짐도 함께한 것이다.

이같은 심상치않은 조짐은 유원적이고 일회적인 것이 아니다. 최근에 일어나고 있는 몇몇 사실들은 서로 맥을 같이하는 흐름을 갖고 있다. 유신체제가 5공과 6공의 독점적인 전권으로 넘어가면 한국 현대사의 비극적인 고비였던 12.12사건에 대한 검찰의 수사 결과나 현 정부의 통일, 외교, 안보정책을 이데올로기적 측면에서



꿈같은 현실

태생적 한계 고리 끊지 않고서는...

검찰은 지난 10월29일 12·12사태에 대해 "군의 주도적 장악을 목적으로 사전계획하여 실행된 군사반란"으로 사후 폭력에 결론내리고는 그 군사반란 수괴자 및 하수인들에 대해 기소를 유예한다고 발표했다. "대다수 국민들도 타당성 지난 일로 갈등과 반목을 지우며 국장을 존중을 표해하고 국가 발전에 지장을 주는 것을 바라지 않을 것"이라며 "대체적 평가는 후세에 맡기고 사법적인 판단은 검찰의 결정으로 마무리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보기 드문 심판원의 결정사유를 덧붙이기까지 했다.

우선 검찰의 이번 어떤 결단을 살펴보자. 피고소인 38명중 대표적인 전두환 전대통령의 죄목을 보면 다음과 같이 들린다. 반란수괴, 불법집권, 지휘관제임직수괴이탈, 상관 살해, 상관 살해미수, 초빙살해, 각계목마당 사형에 처해 오히려 모자란다는 제 형벌을 명시한 형량이 단죄의 대상이 아니야 마땅하다고 검찰은 평가하고 있다. 전두환 전대통령 반란입부에 동업자이자 하수인인 노태우 전대통령, 유학생, 황영시, 장세웅, 정호승 씨 등 37명 또한 반란부의 중 및 반란 중요 입부자들, 반란부하들의 죄를 살펴보면, 검찰은 다음과 같이 들린다. 상관 살해, 상관 살해미수, 초빙살해, 각계목마당 사형에 처해 오히려 모자란다는 제 형벌을 명시한 형량이 단죄의 대상이 아니야 마땅하다고 검찰은 평가하고 있다. 전두환 전대통령 반란입부에 동업자이자 하수인인 노태우 전대통령, 유학생, 황영시, 장세웅, 정호승 씨 등 37명 또한 반란부의 중 및 반란 중요 입부자들, 반란부하들의 죄를 살펴보면, 검찰은 다음과 같이 들린다. 상관 살해, 상관 살해미수, 초빙살해, 각계목마당 사형에 처해 오히려 모자란다는 제 형벌을 명시한 형량이 단죄의 대상이 아니야 마땅하다고 검찰은 평가하고 있다.

있구나 싶어보이는 대목이다. 그러나 많은 판자가 들어와야 하는 것이다. 비록 구속된 관리들을 1년 여만에 대부분 석방시키고, 비리제벌에선 검찰의 자원의 불공구 기소로 간대버린 사법부는 법의 형평성까지 잃어버린 처사라는 비판까지 감수하며 관대한 판결을 베풀었다. 사법부의 이러한 태도에 부응하여 검찰은 대다수 국민과 역사를 위해 군사반란자들에 면죄부를 발행하기로 최종 결정을 내렸다. 범죄상의 기소권자의에 대한 검찰의 재단권은 국민과 현실을 무시해버리는 관행이 아닌은 본분이다. 그러나 어떤 일인지 이 군사반란자들이 대통령과 고위관료로 되어 국가 발전에 기여하기 때문에 이 같은 관용을 베풀었다는 것이다. 국제간의 형평에서 살아남고 남북통일에 대비해야 할 시기기에 더욱 면죄부를 발행하지 않을 수 없었다는 것이다.

혹시 하던 기대가 무산되어 실망감이 크지만 놀랄 일은 아니다. 우리나라 검찰이란 기관에 따라 웃을 바를 입는 활판이지, 기법이 정형하여 법 무르게 하는 눈을 찾아주는 소나무 같은 활판수가 아님을 명히 알고 있기 때문이다. 현재 여론은 '형이상'의 태상은 못 속인다는 쪽으로 모아지고 있다. 여론을 감안한다면 단호한 결단으로 파간히 태도를 보여야 할 것이다.

국민株에서 세계株로!

ROSCO

국내최초 '뉴욕증시' 상장!

NEW YORK

뉴욕증권거래소

세계 최고의 경쟁력과 경쟁능력을 갖춘 세계 최고의 기업에게만 그 문을 열어온 금융시장의 매가, 뉴욕증권시장 -

포항제철은 뉴욕증권시장의 상장을 계기로 국민의 기업에서 세계의 기업으로, 한국을 이끌어 온 기업에서 세계 속의 기업으로, 명실상부한 인정을 받았습다.

이제 포항제철은 뉴욕을 시작으로 런던, 동경증권시장에 이르기까지 세계를 이끌어갈 기업으로 국제경제의 중추가 될것을 약속드립니다.

포항제철